

‘우경화’의 마법 풀기: 내셔널리즘의 충돌과 보편 윤리의 획득

조관자 _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일본비평』 10호의 특집 주제는 “현대 일본의 보수 그리고 우익”이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언론은 일본의 변화를 줄곧 우경화로 지적해 왔다. 우경화를 저지하려는 ‘일본 때리기’가 일본의 우경화를 ‘역사의 필연’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듯도 했다. 우경화가 배외주의를 동반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우경화를 부각시키는 우리의 태도는 ‘반일감정’이라는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역할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특집 주제에서 ‘보수’와 ‘우익’의 개념을 나누었다. 일본사회의 변화를 몽땅 그려 ‘우경화’로 호도하지 않고, 일본의 현상 변화를 심층적,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자는 의도에서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할 추세며, 동아시아의 갈등은 역사인식논쟁과 영토분쟁을 넘어서 외교분쟁으로 번졌다. 이러한 사태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만이 능사가 아니며, 일본의 우경화 방향과 수위를 정확히 견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일본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경화’의 현상과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하, 우리사회에서 전개된 ‘일본 우경화’ 비판이 놓치기 쉬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의 개인적인 말’이 길어져 송구하지만, 특집 주제의 다양한 논의를 심화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1. ‘우경화’ 주문(呪文)에 걸린 일본과 한국

1999년 8월의 한 일간지는 일본사회에서 ‘혁신’이 쇠퇴하고,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의미를 상실했다고 전한다.¹ 당시 ‘새 역사 만들기 모임’의 역사 왜곡, 우익 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도쿄도지사 당선, ‘주변사태법’의 제정 등이 우경화 현상으로 떠올랐다. 이후 한일 문화개방정책으로 민간교류가 활발해졌지만, 2005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국과 중국에서 거센 반일 시위가 일어났다. 물밑에선 일본의 유엔 안장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정치적 저항의 의미도 있었다. 그런 분위기로 한국에서는 ‘우경화하는 신의 나라’에 대한 대중의 위화감이 커졌고, 일본에서도 ‘협한류’의 기운이 파급되었다.²

제1기 아베(安倍晋三) 정권(2006~2007)은 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아시아 외교에 신중을 기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한류’ 붐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제2기 아베 정권(2012~)은 ‘강한 리더십’을 과시하여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새로운 반전은 일본의 침체된 상황을 반영한다. 2010년 이후 경제대국·군사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영토 문제로 일본을 압박하는 가운데, 장기불황에 3.11대지진까지 겪은 국민들 안에서 ‘강한 일본’을 욕구하는 심리가 배가된 것이다.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2013년 말, 세계가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에서 대규모 반일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점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반대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언론만 들끓고 외교적 마찰만 심화된 모습이었다. 2010년 영토분쟁에서 격렬한 반일시

1 한상일, 「시론 일본 우경화 바로알자-과거사 미화...국권강화 노려」, 『조선일보』, 1999. 8. 23.

2 한국에서는 노 다니엘의 『우경화하는 神의 나라: 일본 지배세력의 정신세계』(랜덤하우스 코리아, 2006)가 출판되었다. 일본에서는 2ch에서 암약한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マンガ嫌韓流』(2005)가 출판되자, 이에 대한 비판서로 오타 오사무(太田修) 등이 쓴 『『マンガ嫌韓流』のここがデタラメ』(東京: コモンズ, 2006)도 출판되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모의 ‘협한’ ‘반일’에 중지부를 찍고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했다.

위를 방조했던 중국 정부가 시위를 자제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³ 중국 내부의 사정이 어떠한지,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보더라도 중국의 대외적 자신감이 강력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우경화 행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중에도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그 변화를 포착하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언어다. 2013년 12월 29일, 『아사히신문』은 “젊은이들이 우경화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뭉뚱그려 우경화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⁴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급격히 우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⁵ 그 근거는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었다’에 응답한 33%에 있다. 이 보도가 오보는 아니지만, 일본 젊은이들의 전체적 의식 성향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질문 항목별로 20대의 응답을 보면 태평양 전쟁은 “침략전쟁이었다” 45%(50대 60%), “침략전쟁이 아니었다” 33%(50대 24%), 영토 문제로 한·중에 “크게 반발감 느낀다” 39%, “어느 정도 느낀다” 44%, 영토 문제 해결 위해 “무력행사도 각오”에 찬성 27%, “방위력” 증강에 찬성 38%, 삭감 6%, 애국심 “있다” 74%, “없다” 25%, “애국심의 학교 교육”에 찬성 31%, 반대 64%, 애국심이란 말에서 연상하는 내용으로 “향토·전통문화에의 애착” 58%(있다 69%), “국가에의 충성” 13%(있다 9%), “올림픽·월드컵 응원” 10%, “전전의 군국주의” 9%, “천황에의 경애심” 5%로 나타났다. 헌법 9조의 개정으로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에 찬성 33%, 반대 47%, “재일한국·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는 주장에 “크게 공감”

3 중국 정부가 반일 정서의 반정부 정서로의 돌변을 우려해 시위를 억제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야스쿠니 국면’서 느긋한 中…반일시위 억제」, 『연합뉴스』, 2013. 12. 30.

4 응답자 중에서 남성이 67%다. 그 밖에 20대의 선택 중에서 인터넷을 매일 3시간 이상 사용은 23%, 인터넷 교류만으로도 ‘친구’로 인정 26%, 현재 생활에 만족 안함 7%, 부모 세대와 비교해서 “순해 보고 있다” 47%, 무당파층 50%,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투표 51%로 이들 중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찬성 60%,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사실을 모른다 43%, 선거로 일본사회를 “바꿀 수 없다” 79%의 결과를 보였다.

5 “『TV조선 특보』 日 20대 33% ‘태평양전쟁 침략 아니다’”, TV조선, 2013. 12. 30.

6%이다.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반일시위와 한국의 반일감정을 떠올린다면 일본 젊은이들의 반발감이 특별히 과열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향토와 전통,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일본에서만 유별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력행사와 방위력 증강과 자위대의 국군화 문제에 대한 20대의 찬성률은 군사력의 강화를 시도하는 현 정권의 관점에서 보면 목표에 미달되는 수치인 셈이다. 역사 왜곡은 2000년대에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확산된 결과이고, 2012년 한국 대통령의 친황 발언으로 젊은 층의 ‘혐한 감정’이 급격히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군비 팽창이 아닌 평화 유지를 더 간절히 원한다. 상호작용 없는 고요 속에서 배타적 감정이나 폭력적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일본의 우익 열풍을 과대 선전하는 한국의 태도가 혐한 감정과 군사적 대결의식을 재촉하는 더 강력한 주문(呪文) 효과를 내는 사실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2. 일본 우경화의 ‘현상과 본질’

일본의 우경화로 지목되는 현상은 무엇이고, 이 현상에 내포된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경화를 극복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함께 만들어갈 공동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 전쟁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부정과 정치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한 문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우경화’라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과거의 불행을 반성하는 보편적 윤리가 국가의 정치적 책임 논리에 갇혀 있는 형상이다. 식민지 지배와 인권 유린에 찬성하거나 전쟁을 반복하려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 일본과 한·중이 이 문제로 대립을 반복하는 핵심 이유는 내셔널리즘과 집단기억이 보편적 윤리감각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그 밀어내는 힘은 일본 내부에만 있는 것일까? 한·중의 집단기억과 민족해방사관은 보편적 윤리의 확산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었을까?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 윤리와 역사인식의 가능성이 집단적 기억 및 내셔널리즘과 충돌하는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내셔널리티”를 ‘보국심’(報國心)으로 번역하고, 보국심은 “타국에 대해 자타의 차별을 만들고, 비록 타국을 해할 뜻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후하고 타국에게 박하며, 자국은 스스로 독립하려는 것”이라고 간파했다.⁶ “보국심과 편파심은 이름이 다르지만 실은 같은 것”이며, “일시동인(一視同仁)·사해동포의 대의와 보국진충(報國盡忠)·건국독립의 대의는 서로 도리에 맞지 않고 양립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후쿠자와의 냉정한 현실 인식은 서세동점의 시대에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아시아의 ‘나쁜 친구’와 절교하는 실천적 태도로 이어진다. 내셔널리즘은 일본어로 처음 번역될 때부터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도 않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보편 윤리와 양립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애초에 보편 윤리로 확립될 수 없는 내셔널리즘이 20세기의 동아시아를 지배한 ‘보편’이었다. 국가적 독립과 민족적 주체의 확립이라는 명분은 타국만이 아니라 자민족에 대한 테러도 내전도 정당화했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내셔널리즘은 공통적으로 충, 효, 제사 의례, 공동체 의식과도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 공식 논리와 풀뿌리 공동체의 논리가 함께 작동한다. 일본의 경우, 패전과 부흥으로 ‘내셔널리즘의 편파심’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세기 전환기에 국가적 위기의식이 고양되면서 풀뿌리 내셔널리즘이 분출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붉은 악마’의 ‘대한민국’ 열기를 본 일본인들은 “국가 내셔널리즘이 아닌 민중 내셔널리즘”의 흥겨운 어우러짐을 노골적으로 부러워했다.⁷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반미 운동의 흐름에서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대신에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는 반미 민족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본이 자민족 중심의

6 “자국의 권리(權)와 의무(義)를 신장하고, 자국의 국민(民)을 부유케 하고, 자국의 지덕을 닦고, 자국의 명예를 빛내려고 공부하는 자를 보국의 민(民)으로 칭하고, 그 마음을 보국심이라고” 정의했다. 福澤諭吉, 『文明論之概略』, 岩波書店, 1995, 274~275쪽.

7 黒田勝弘, 「『赤い群衆』たちの愛国心」, 『Voice』, August 2002, 104~111쪽.

애국심 양성에 열중하면서부터 역사인식의 문제는 집단적 기억의 충돌로 변질되었고, 영토 분쟁과 외교 마찰로 점점 격화되었다. 이러한 격돌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무력 충돌까지 각오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보편의식은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 21세기 동아시아에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보편’이 여전히 내셔널리즘이었는가? 영토분쟁으로 고양된 ‘보국심과 편파심’도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양산되는 다원적 가치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다양한 삶의 양식과 가치의식이 빈번하게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편은 주체의 언어적 조건이나 심리적 조건에 기반을 두거나, 혹은 개별을 초월하는 규정적인 이념이나 유토피아적인 요청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⁸ 보편은 특정 집단에서 신념화한 가치나 유토피아의 확대가 아니라 국경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넘어서 다수의 합의와 공감을 획득해 가는 실천 운동인 것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보편의 가능성은 차이들의 정치적 충돌과 해결을 위한 만남의 연쇄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만일 동아시아에서 보편 윤리의 공감대를 넓히지 못했다면, 그것은 일본만의 책임이 아닌 모두의 실패인 것이다.

둘째, 평화헌법 개정론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비롯한 자위력 강화론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적 방안을 찾는 것에 있다. 냉전의 붕괴로 일본의 우익은 미일동맹의 탈각과 자위력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냉전시대의 좌익이 미일동맹을 부정하면서도 군사적 재무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그렸기 때문이다. 한때 그들에게 아시아는 가난한 민중의 ‘혁명적 유토피아’로 상상되었고, 아시아 인민들과의 연대 가능성만으로도 ‘반미’의 전략적 구호를 외칠 수 있었다.

8 주디스 버틀러는 보편은 늘 “정치적으로 분절화되는 차이의 관계”이며 “개별적인 것의 연쇄 고리” 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절대 정의와 윤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을 구현하려 한다면 역시 버틀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틀러, 「普遍なるものの再演—形式主義の限界とヘゲモニー」, 『偶発性・ヘゲモニー・普遍性: 新しい対抗政治への対話』, 青土社, 2002, 52쪽.

그러나 현재 일본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직면했다. 과거 좌익과 현재 우익의 주장대로 미일동맹을 탈각한다면, 결국 일본은 중국의 패권에 포섭되거나, 일본 스스로 핵무장을 추구할 것이다. 그 어느 쪽의 변화도 힘의 대결을 자극하고 지역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아베 정권을 비롯한 어떤 좌우파 정당이 집권해도 현실적으로 미일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⁹ 미일동맹에 입각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안전보장의 최선택인 까닭이다. 한국과 중국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반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염려하지만, 군사 문제에서 우려되는 우경화란 오히려 미일동맹의 파괴와 핵무장 노선에 있다. 미일동맹을 ‘대미종속’으로 생각해 온 일본에서 우익은 ‘자주방위론’을 외친다. ‘자주’라는 사상적 가치를 추구해서라기보다, 미국의 쇠락 혹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외면과 배신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¹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일본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누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일본의 미국 의존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일 수 없다. 중국과 한·일의 좌파 진영도 일본의 우익처럼 미일동맹을 대미종속으로 비판하고 그 탈각을 주장하지 않았던가? 미일동맹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면, 중국과 한반도에서 일본을 공격하지 않는 ‘평화헌법’ 또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책임지는 ‘미일동맹’ 수준의 신뢰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과거 일본의 ‘원죄’에 따른 불신감으로 일본에게만 ‘평화헌법’과 ‘비무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일본의 안전보장 욕구를 우경화로 비판하기보다 신뢰 구축을 위한 한·중의 태도 변화와 북한 핵 위협의 해소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언론은 ‘보통국가’로 변하려는 일본의 욕구를 단순

9 민주당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설에 관한 공약도 결국 미일동맹 중시로 포기되었다.

10 伊藤貫, 『自滅するアメリカ帝国—日本よ, 独立せよ』, 文春新書, 2012; 日下公人·伊藤貫, 『自主防衛を急げ!』, フォレスト出版, 2011.

히 우경화로 몰아붙이며 억제시키려고만 한다. 동아시아 3국이 자국의 국가적 이익과 집단적 기억을 우선시키고 냉전적 인식론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경화하는 일본’만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러한 비판론은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외교적 고립을 성사시킬 수는 있어도, 우익 정치가에게 투표할 수 있는 풀뿌리 민족주의와 넷우익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의 ‘반란’을 저지할 수 없다. 그들은 침략을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만이 아니라, 일본의 ‘대미종속’과 ‘군사적 식민지’를 문제 삼았던 좌익 담론을 원용하여 ‘자주방위’를 외친다. 일본 청년들의 우경화를 부추긴 책임은 일본의 우익과 일본의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한국의 내셔널리즘에도 있다.

셋째, 우익 정당의 출현과 넷우익의 배외주의적 활동이다. 2012년 9월에 우익 정당으로 간주되는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가 출범하고, 아시아 침략에 대한 부채의식이 없는 세대가 인터넷과 거리의 단발적인 행위 공간에서 사회적 불만과 실존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¹¹ 인터넷의 편향된 정보에 의거한 ‘디지털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그들의 배외주의와 애국심 선동이 우익 정당의 세력화를 돕는 꼴이다.¹² ‘행동하는 우익’은 아직까지 극소수이지만, 이들의 편향된 정보 유통과 정치 세력화를 견제하는 사회적 능력이 요구된다. 글로벌리즘의 확대로 단일민족 신화를 가진 한국과 일본에서도 ‘다문화 공생’의 기운이 확산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도에서 통합과 배제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쟁에서 미래 상상력을 상실한 청년들

11 유튜브에 ‘재일조선인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의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동영상이 다수 게재되었다. 2012년 9월 16일, 나고야 오스(大須)의 상점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리아안댄스 페스티벌’은 우익 단체인 ‘애국가락부’와 ‘재특회’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들의 가두연설에서 사쿠라이 마코토(桜井誠)는 “조선인을 죽이라”는 외침은 “친황이 한국에 오면 손발을 묶고 무릎을 꿇리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당한 응수라고 주장한다. 2013년 6월에 ‘재특회’가 신오쿠보 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벌이며 한국계 상점들의 영업을 방해할 때, 확성기를 들고 “조선진”을 바퀴벌레, 구더기로 부르며 “없애버리겠다”고 외친 청년은 10대 후반으로 보였다. 어느 게시물을 보더라도 과장되고 편향된 정보에 휩싸인 편협한 감정들이 배설되는 모습이다.

12 ‘디지털 포퓰리즘’은 정보 사회에 만연된 참여 민주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낸다. 이상혁, 『용어로 풀어보는 글로벌 이슈』, KP Publisher, 2010. 정보의 신뢰성보다 관계에 치중하는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이 생산된 정보를 합리적 검토와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특정 이해집단이 정치적 목적 혹은 대중선동을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감정적인 집단논리로 변질될 위험이 지적된다.

이 배외주의 폭력에 쏠리는 현상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복지정책의 퇴행을 비판하는 사회적 약자와 이민자들이 국민국가의 사회통합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¹³ 그러나 2010년 이후에 복지국가인 북유럽에서도 청년층이 배외주의에 젖어들고, 그들의 지지를 얻는 우익 정당이 활동이 두드러졌다.¹⁴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복지생활을 약속했던 자본주의 문명사회에 닥친 ‘미래 불확실성’이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극복되지 않겠지만, 일국적 단위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생태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처럼 지역 및 세계 단위의 기구가 협력하여 글로벌 사회에서 공공성을 재구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

3. ‘우경화’의 역사적 용법과 ‘민족주의’의 반전

위에서 ‘우경화’ 인식 프레임이 놓치는 문제는 ‘보편적 윤리 획득을 위한 실천’과 ‘내셔널리즘의 충돌’이라고 제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민족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문제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유독 ‘우경화’라는 언어의 마법에 걸려든 걸까?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이념과 용법이 1945년 이전과 이후에 정치적으로 전변한 과정을 거칠게나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우경화 용어는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다.¹⁵ 일본에서 ‘우경화’ 용어는 1937년에 파시즘 현상을 문제 삼는 세계정세 보고서에서 발견

13 2005년 11월 파리 교외에서 발생한 이민자 출신 청소년들의 연쇄 방화·소요 사건은 국가복지와 사회통합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폭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町田敦子·西岡由美, 「フランス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受入れ制度と社会統合」, 『労働政策研究報告書No.59 欧州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受入れ制度と社会統合—独・仏・英・伊・蘭5ヵ国比較調査—』,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06, 75쪽.

14 노르웨이에서 2011년에 일어난 우익 청년의 대규모 테러 사건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노르웨이 테러범 “다문화주의, 유럽 파괴”」, 『연합뉴스』 인터넷판, 2011. 7. 24.

15 세계에서 우경화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좌익과 중도 세력의 보수화·반공주의화·국수주의화 그리고 우익의 과격화(극우화)까지가 모두 우경화로 포착된다.

된다.¹⁶ 당시 민족주의는 우익의 문화적 정치적 이념 혹은 나치즘의 인종주의와 결합된 파시즘의 이념을 가리켰다. 천황제에 입각한 ‘일본정신’도 우익 민족주의에서 강조되었고, 일본주의 내셔널리즘에 일본의 좌익이 동조하였으며 조선의 민족주의자들도 동원되었다. 우익 민족주의는 영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사상으로 동아시아의 민족적 연대를 주장했다.¹⁷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중국과 북한, 일본의 좌파 진영에서는 반미의 연대전선을 형성했고, 반제국주의 투쟁의 원리로서 민족주의는 좌익의 정치 이념으로 반전되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가 창설되고 좌익 운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자, 좌익은 ‘전후 민주화’의 ‘역코스’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일본의 좌익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와 이승만 정권을 ‘우익 매국노’로 불렀다. 즉, 동아시아의 진보 진영에서 우익은 ‘민족주체성’을 상실한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표상되고, 좌익이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선점한 것이다.

냉전시대에 ‘우경화’ 용어는 자민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좌파 내부의 정파 싸움에서도 빈번히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 좌익의 노선 갈등이 증폭하면서 공산당이 사회당을 비판하고 사회당 좌파가 사회당 우파를 견제하며 신좌익이 공산당과 기성 노조를 비판할 때, 좌익의 ‘정통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우경화’가 지탄되었다.¹⁸ 그러나 탈냉전으로 좌익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우익 민족주의가 부활하는 과정에서, 좌·우익에 공통된 내셔널

16 「ルーズヴェルト政策の「右傾化」」, ロシア問題研究所政治経済研究部 編, 『世界政治経済情報』 第2輯, ナウカ社, 1937.

17 남북 분단과 6·25전쟁을 겪은 한국에서 이광수가 과거의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자로 통용되었던 것은 민족주의가 우익 담론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친일파가 반민족주의로 단죄되고 반미적인 민족 운동이 활력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의 민족주의도 좌파 헤게모니에 완전히 합류했다. 한국의 민족주의가 관제 이데올로기나 민족사관·민족문화론을 넘어서 민족해방과 사회변혁 운동의 이념적 정서적 무기로 전변된 것이다.

18 일본 국회도서관의 ‘우경화’ 검색 결과, 1963년부터 매년 2건 이상 보이지만, 1968년에 13건으로 많아진다. 日本共産党中央委員会, 「右傾化をすすめる社会党の外交方針(案)-世界と日本」, 『前衛』(通号 204), 1962. 12, 161~165쪽; 松本岩雄, 「右傾化に抗する左翼的潮流の構築を」, 『社青同第8回定期全国大会総括』, 1968. 11; はっちょう かずを 「労働組合の右傾化をどうふっさるか—自治労北九州市労連の天下り合理化との闘い」, 社会主義協会 編, 『社会主義』 通号 200, 1968. 6, 134~142쪽; 浅井美幸, 「自民党の右傾化と危険思想-倉石発言は自民党政権の本音か」, 『公明』 通号 66, 1968. 4, 52~61쪽. 이후 1980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이 등장하면서 37건으로 증폭한다.

리즘(민족주의, 국민주의, 국가주의)의 문제는 흐지부지 덮어둔 채 ‘우경화’라는 언어만 공허하게 확산된 것이다.

냉전시대에 좌익은 미일동맹에 반대하고 ‘아시아와의 연대’를 표방했다. 전후 일본의 지식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점한 혁신·좌익은 가끔씩 고개를 치켜드는 우익의 망언을 적시에 때려주었다.¹⁹ 그러한 좌파의 자정 능력을 가리켜 한국 언론은 ‘일본의 양심’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오늘날 ‘일본의 양심’은 모두 타락한 것일까?²⁰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강력해진 것은 좌파가 우익 민족주의에 공감하는 바가 커서 침묵으로 돕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나 넷우익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규제 움직임처럼, 편파심이 극단으로 달리면 일본 내부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좌파의 몰락을 한탄하기보다, 좌파의 지향성이 우파의 정치적 실천에 녹아든 측면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탈냉전 이후 좌파 운동이 무력해진 것은 일본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중국은 시장경제로 선회하여 군사대국으로 거듭났고, 한국은 민주화를 통해 ‘혁명’ 충동을 체제 내로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 체제 변화에도 공산당의 공식 사관이 건재한 중국은 논외로 치자.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친일 논쟁, 과거사 논쟁, 교과서 논쟁 등 다양한 역사인식 문제가 분출했고, 이념 논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좌우 진영의 정치적 타협과 공존을 의미했던 ‘1955년 체제’가 무너진 일본에서 전후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는 상황도 역시 역사 변화의 수순이라 할 것이다.

19 1952년 일본의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 직후, 일본 국회에서 전범을 일본의 애국자, 희생자로 명예 회복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민 여론의 지지와 사회당의 찬동 하에 1953년 8월 전범의 사면이 가결되었다(「戦争犯罪による受刑者の赦免に関する決議」, 第016回国会 本会議 第35号). 당시 공산당은 사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戦犯釈放・赦免の国会決議って?」, しんぶん赤旗, 2005. 6. 15), 무장투쟁으로 의식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결의 과정에 참가도 못한 결과다. 일본의 좌파가 전쟁 책임을 통감하고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 ‘국민적 애도 공동체’의 집단적 결의를 막아내고 바깥 만큼의 정치적 능력은 처음부터 부재했다.

20 양심이란 원래 개인의 내면에 속한 것이지만 한국 언론은 ‘일본의 양심’이란 수사를 선호한다. 좌파의 실종이 양심의 멸종을 의미하지 않지만, 한국의 수사적 습관은 일본 이미지를 편향적으로 만들어 내는 결립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일본의 양심’이란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일본인 한국 연구자를 만난 적이 있다.

『일본비평』 본호 특집의 목적은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적 인과와 동시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본사회의 보수화와 우경화를 세부적으로 심층 분석하는 것에 있다. 세부적 주제 영역은 아시아주의, 정당 정치, 장기불황과 격차사회, 네티위크와 미디어, 보수주의 정치와 미학, 만화와 우익 대중주의, 자위대 창설의 역사, 기독교 담론에 걸쳐 있다. 필자들에게는 각 논문에서 정의하는 ‘보수’와 ‘우익’ 개념을 명시하도록 부탁했다. 이번 호의 특색은 『일본비평』에서 처음으로 대론(對論)의 형식을 시도한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원로 학자가 실제 필담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같은 주제의 두 글을 나란히 배치했다.

대론으로 꾸민 한상일의 「일본의 우익사상과 아시아주의」와 마쓰모토 겐이치의 「아시아주의자의 원상」은 각각 일본 안팎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아시아 연대의식이 얹히며 갈등한 모습을 다룬다.²¹ 대론의 형식은 양자의 인식 차이는 물론 우익사상이 갖는 아시아와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일본인의 생각 속에서 우익사상이 아시아와 만나는 지점은 무엇이며, 일본 밖에서는 일본의 아시아주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대론은 일본과 아시아를 나란히 관통하면서도 서로 엇갈리는 두 갈래 ‘우익’론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하겠다.

박철희의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는 정당 간 역학, 정당 내부의 역학, 의원들의 활동 양상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한국의 언론은 아베 수상의 행보만을 보도하지만, 이 논문은 복잡하게 전변하는 일본 정치의 보수화 흐름을 전체적 시야에서 명료하게 정리해 준다. 과연,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아시아와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필자는 현재 일본의 리버럴리즘과 보수, 그리고 우익의 동향과 대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미래를 가늠케 한다.

21 마쓰모토는 일본의 역사적 문맥에서 ‘보수’와 ‘우익’ 용어의 차이를 구별하고 우익사상 연구에 헌신했다. 그는 패전 이후의 역사적 용어 ‘대평양전쟁’이 아닌, 전전의 일본인이 사용한 역사적 용어 ‘대동아전쟁’을 채택한다.

이정환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는 자신의 생활사에만 몰입하는 생활보수주의에 주목하여 일본의 보수화에 내포된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필자는 시민사회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에서 대두된 구조 변화에 생활보수주의적 정서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어서, 일본 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가령 아시아와의 긴장을 초래한 대결주의적 외교도 거대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생활보수주의의 정치적 성격이 더해지면서 그 극복을 어렵게 한다. 이 글은 생활의 차원에 밀착해서 일본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다각적으로 넓혀준다.

황성빈의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심리와 논리」는 넷우익 현상과 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여 일본 내 배외주의와 내셔널리즘의 동향을 가늠케 한다. 특히 넷우익에 대한 기존 언론의 보도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넷우익을 배양시킨 기성사회의 문제를 보여준다. 필자는 넷우익이 특정한 주의주장을 가진 정치 세력이 아니라 감정적 공감에 따라 유동하며 그 모습이 변형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밝힌다. 이러한 견해는 넷우익에 미치는 사회적 작용이 국경을 넘어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상욱의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은 ‘정치의 심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보수와 우익의 정치의식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미시마 유키오가 패전으로 주어진 전후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급진적 심미의 정치의식을 드러냈다면, 아베 신조의 저술에 나타난 ‘미’는 ‘관료적 수단’으로서 체제유지를 위해 동원된다. 이 글은 정치와 미의 관계를 다루어 일본의 보수주의와 우익사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

한정선의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은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통되는 우익 대중주의의 언설과 가시화 전략을 분석한다. 필자는 일본 우익의 욕망, 신념, 논쟁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급속히 전이되고 있다고 전제한다. 1990년대에 인기를 얻은 『전쟁론』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역사수정주의의 보급에 기여했으며, 젊은이들을 자민족 중심의 국가의식으로 인도했다. 이 글은 고바야시 만화의 가시화 전략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우익사상이 일본 대중문화 속에 파급되는 양상을 밝힌다.

서민교의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과 1990년대의 방위 구상의 역사적 맥락을 우익 세력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구 해군(「Y위원회」)의 활동과 경단련, GHQ 등의 다양한 재군비 구상이 자위대의 창설로 이어지는 과정을 정리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1990년대 자민당의 방위 구상을 소개함으로써 현재 불거진 ‘집단적 방위권의 행사’ 문제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특집 서평은 구로즈미 마코토 「근대 일본 그리스도교에 대한 현대 우익적 논고」다. 필자는 먼저 천황의 원호를 사용하는 일본에서 ‘근대’라는 시대 인식, 천황을 중심으로 한 ‘보수’와 ‘우익’의 질서의식을 소개한 뒤, 현대 일본의 기독교 관련 논저 2권을 동양사상과 서양 신학의 범주에서 해박하게 논한다. 아울러 일본의 기독교가 보수와 우익사상에 연결되어 나타난 천황관, 무사도의 낭만주의, 아시아 인식의 문제가 언급된다. 일본 내 소수자의 종교인 기독교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사상적 매개다. 필자의 우익 논고는 인간(일본) 중심주의를 뛰어넘는 윤리사상의 보편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 밖에 ‘연구노트’ 1편과 ‘연구논단’ 2편이 더해져 『일본비평』 10호가 알차게 꾸려졌다. 김철의 「오늘의 적도 내일의 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일제 청산’과 김수영의 저항」은 김수영 시인이 일본어로 쓴 ‘시작 노트’를 화두로 삼아 ‘친일 청산’의 사상사적 문제를 치밀하게 성찰한다. 조아라의 「한일 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는 한일회담에 대한 케네디 정권의 ‘개입’ 양상을 한·미·일 외교사료의 교차 분석을 통해 실증하고 있다. 유혁수의 「제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는 일본에서 뉴커머로 정착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동포사회의 단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21세기 일본의 ‘정치 구도’와 ‘정신 구도’는 어디로 흘러갈까?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진보와 보수,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양자 개념을 차용하든지 양극단 사이에서 동요하며 균형 감각을 키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안팎으로 시선을 넓히면서 중도와 중용을 살리는 권력 주체들이 다수파를 이룰 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작동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지배 권력이 ‘우익’인가 ‘보수’인가, 저항 세력이 ‘좌익’인가 ‘우익’인가를 밝히는 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극단의 혼재 상태와 조정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일본 안팎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다수자가 아시아의 미래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동아시아에 내셔널리즘의 ‘보국심과 편파심’을 극복한 새로운 보편의식이 싹튼다면, 일본의 우익 사상도 새로운 보편과 만나는 쪽으로 스스로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